

2006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노대명
최승아 원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머 리 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축된 근로빈곤층 패널데이터이다. 이 패널 데이터는 지난 5년간 우리사회 근로빈곤층 연구 및 빈곤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2002년 1차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미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취업여부 및 취업기간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규모추정을 시도함으로써 근로빈곤층 연구를 진일보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둘째, 자활조사의 빈곤율 추정작업은 이전에 시도되었던 불완전한 빈곤율 추정작업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롭게도 당시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정된 빈곤율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전국단위에서 비임금가구 및 미취업가구를 포함하여 실시된 이후의 각종 가구소득조사 결과는 그 빈곤율이 과대 추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패널데이터의 1차년도 표본수가 적은 상황에서 표본유지율이 매우 낮아,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존의 패널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소득계층별로 표본 탈락율이 큰 편차를 보이며 특히 빈곤층에게서 탈락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자활조사는 패널데이터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확충 또는 새로운 표본으로의 대체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기존 표본에 새로운 표본을 덧붙이는 것은 가중치 부여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고, 표본을 전부 교체하는 것은 자활조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 복지관련 패널데이터로 자활조사 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패널은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각 패널의 표본을 확충하기보다, 그것을 통합하여 새로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협의의 결과, 기존의 세 패널조사는 하나의 패널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보

고서는 표본을 완전히 교체한 '제2기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1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이다. 물론 표본의 완전교체는 그 동안에 축적된 패널데이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한국복지패널』로 통합됨으로 자활조사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표본규모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PSID나 유럽연합의 ECHP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널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보고서는 패널화 되지 않은 1년차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에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전체적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패널조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원의 김미곤 연구위원과 여유진 부연구위원, 그리고 손창균 부연구위원의 노고가 매우 컸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위 패널조사팀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노대명 연구위원, 최승아 연구원, 원일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진은 지난 수년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1차년도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주제는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소득 및 자산실태, 취업상태 변화, 취업잠재력 등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연구위원과 연구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
-----------	---

제 I 부 조사개요

제1장 서 론	35
제2장 표본추출 개요	41
제3장 조사 내용	64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86

제 II 부 근로빈곤층의 가구, 소득, 취업실태

제5장 인구사회학적 특성	90
제6장 가구특성	96
제7장 소득·지출 및 자산실태	118
제8장 취업실태	139
제9장 직업능력 및 취업욕구	146
제10장 사회보장실태	153

제 III 부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슈분석

제11장 근로빈곤층의 규모	170
제12장 근로빈곤층의 소득구조와 동태성	189
제13장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 분석	212
제14장 근로빈곤층의 기초보장실태 분석	235
제15장 여성근로빈곤층의 빈곤결정요인	263
제1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85

참고문헌	300
------------	-----

요 약

제 I 부 조사개요

제1장 서 론

☐ 추진경과

- 본 패널조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WPS)'을 구축하기로 합의.
-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을 통합하여 예산 비효율성, 목적 비효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조사 목적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함.

☐ 표본규모

- 표본규모는 7,00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함.

☐ 조사분석의 한계

- 패널 구축 첫해에 조사표 개발-실사-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으며 3개 패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더욱 지체됨.
- 2007년에 실시되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회상의 문제와 종합소득세가 신고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5월에 조사할 계획임.

제2장 표본추출 개요

□ 표본설계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함.
- 1단계 표본자료인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함.

□ 패널가중치

- W_{ph} 를 패널가중치라 하면, 가중치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구별로 일정규모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구별 추출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중치 ($W_{1,i}$)를 고려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W_{st})를 고려해야하며, 마지막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W_{pst})를 고려함으로 최종적인 패널가구의 가중치를 부여함.

□ 조사완료가구수 및 가구원수

- 총 446개 표본조사구의 총 7,000가구(일반가구: 3,500가구, 저소득가구:3,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가구 수는 7,072가구임. 가구의 총 조사 대상 가구원수는 14,469명이며, 아동용 부가조사의 응답대상이었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수는 총 758명임.

제3장 조사 내용

□ 조사표의 구성

- 판별조사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본표본 추출을 실시했고, 본 조사는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아동부가조사표 3종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문항

-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 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회보험, 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사,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동용 조사표는 아동 가구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현지조사방법

- 본 조사는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수집된 487개 조사구 2만5천 가구 중 7,000가구의 패널가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사대상 가구에 본 패널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음을 공지
- 조사원은 한국갤럽이 보유한 면접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실사연구원 10명, 조사원 13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 18명 등 총 165명임.

□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함.

□ 조사자료처리

-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수퍼바이저와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함.
-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음.

제 II 부 근로빈곤층의 가구, 소득, 취업실태

제5장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61.9%, 여성가구주가 38.1%로 여성가구주 비중이 비빈곤가구(남성 88.6%, 여성 1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또한,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주가 25.3%, 30대 가구주가 24.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1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장이 46.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음.
-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가 51.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다음으로 고졸(23.6%), 중졸(14.6%), 대졸(7.0%)의 순이었음. 이는 빈곤가구주가 비빈곤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저학력임을 알 수 있음.

제6장 가구특성

□ 일반적 특성

-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비빈곤가구에서는 기타가구가 82.4%로 빈곤가구의 57.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단독가구와 모부자가구의 비중은 빈곤가구(각각 32.1%, 9.7%)가 비빈곤가구(각각 12.0%, 5.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 빈곤가구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중이 35.3%, 1인 가구 32.2%로 1,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15.0%), 4인 가구(11.7%)의 순이었으며, 비빈곤가구는 빈곤가구에 비해 5명 이상 가구규모를 가진 가구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가구규모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거 특성

- 소득집단별로 빈곤가구는 일반단독주택이 38.3%, 다가구용 단독주택 24.5%, 일반아파트 15.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 42.8%, 다가구용 단독주택 18.7%, 일반단독주택이 16.1%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가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이, 비빈곤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생활 특성

- 소득 집단별 생활주년을 살펴보면, 빈곤 가구는 가난하다는 응답이 43.6%, 보통이다 32.6%, 부유하다 0.7%를 차지했으며, 비빈곤 가구는 가난하다는 응답이 24.0%, 보통이다 68.4%, 부유하다 2.9%로 소득집단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 소득·지출 및 자산실태

□ 소득

-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평균소득은 8,547천원, 비빈곤가구의 평균소득은 39,569천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소득 집단별 근로소득의 유무를 살펴보면, 비빈곤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78.8%인 반면, 빈곤가구의 경우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36.1%로 비빈곤가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는 전채가구와 비빈곤가구에서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빈곤가구에서는 현금민간보조금(58.6%)과 기타 정부보조금(71.7%)이 있는 가구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지출

- 지출부문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세금,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하는 총생활비와 농

림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 이자지출, 월세를 별도로 설문하였으며, 이 모든 항목을 포괄해서 총가계지출이라 칭하기로 함.

- 소득수준별 지출규모는 빈곤가구의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가구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50만원 미만 지출가구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출가구가 각각 21.4%와 21.2%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지출가구는 1.5%로 나타났음. 반면, 비빈곤가구는 300만원 이상 지출가구가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지출가구가 30.7%로 나타났으며, 50만원 미만 지출가구는 전체의 0.1%에 불과,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가구도 4.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8장 취업실태

□ 경제활동 참여 실태

- 가구주의 취업비율을 소득집단별로 보면, 빈곤가구에서는 48.7%, 비빈곤가구에서는 86.4%로 빈곤 가구의 취업 가구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빈곤가구보다는 비빈곤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음.
- 비빈곤가구의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65.6%가 정규직인 반면, 빈곤가구에서는 22.7%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현재 직장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가구주는 30년 이상(20.5%)이 가장 높았으며,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는 5~10년 사이가 2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근속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빈곤가구가 약 14.8년, 비빈곤가구가 약 9.7년 정도로 나타났음.

제9장 직업능력 및 취업욕구

□ 직업능력

-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보면, 빈곤가구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59.7%, 단순 근로 미약자가 11.1%, 근로능력 없음이 7.1%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가구 가구

주는 90% 이상이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37.7%), 중증장애(37.1%)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2.4%의 응답자만이 필요하다(다소 6.2%, 아주 6.2%)고 하여 다소 낮은 필요성을 보임. 또한,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17.2%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비빈곤가구의 경우는 10.7%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0.5%의 응답자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에서 경험자는 1.2%, 비빈곤가구에서는 0.3%로 각각 나타나 해당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제10장 사회보장실태

□ 공적연금

- 소득계층별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에서 빈곤가구(99.7%)가 비빈곤가구(93.9%)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빈곤가구(0.2%)가 비빈곤가구(5.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로 비빈곤가구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또 국민연금보다 후한 급여를 제공하는 특수직역연금에 비빈곤가구의 가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에서, 빈곤가구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72.3%로 비빈곤가구의 54.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자는 빈곤가구(9.2%)에 비해 비빈곤가구(19.5%)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음.

□ 건강보험

- 소득집단별 건강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빈곤가구는 가입자가 80%이고 미가입자가

20%로 나타났으며, 미가입자 중에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60.5%, 2종 수급자가 31.4%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가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곤가구의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 및 산재보험

- 소득집단별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빈곤가구에서는 가입이 29.2%, 미가입이 69.9%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가구는 가입이 66.9%, 미가입이 32.6%로 나타나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집단별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빈곤가구는 가입이 29.3%, 미가입이 69.7%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가구는 가입이 67.0%, 미가입이 32.6%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기타보험

-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현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에 해당되지 않는 66.8%를 제외한 33.2%의 해당자 중에서 적용자가 56.3%, 미적용자가 43.6%로 나타났음.
-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빈곤가구에서는 적용 20.6%, 미적용 79.1%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가구에서는 적용 60.4%, 미적용 39.5%로 나타나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음.

□ 공공부조

- 2005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4.2%, 없는 가구가 전체의 95.8%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가구(7.5%)가 비빈곤가구(1.3%)에 비해 많이 신청했음을 보여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항목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7.5%)이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0.7%로 높게 나타났음. 소득계층별로는, 빈곤가구의 경우에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 필요에 대한 응답이 높았던 반면, 비빈곤가구의 경우는 교육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제 III 부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슈분석

제11장 근로빈곤층의 규모

□ 근로빈곤층의 개념

- 과거 중심적 개념 :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토대로 결과론적으로 취업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중심적 개념. 빈곤층 중 연간 절반 이상을 유급근로에 참여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하며, 실제로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은 전 가구원이 연간 참여한 근로활동기간을 모두 합하여 절반을 초과하는 가구를 근로빈곤가구(Working Poor Family)로 정의
- 현재 중심적 개념 : 현재 또는 조사시점에 근로 또는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근로' 개념을 판단. 그 조작적 정의는 취업상태와 관련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취업자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방식임.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사상 지위 및 업종분포 등 다양한 미시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짐.
- 미래 중심적 개념 : 이 개념은 조사대상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할 근로능력 또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중심적이라고 규정. 이는 근로가능성(Workability)의 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을 규정하는 경우이며,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임. 그 조작적 정의는 장애나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나, 가구여건(보육, 간병 등)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집단을 근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 규모추정

- 본 패널데이터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개념 중 현재 중심적 개념과 미래 중심적 개념으로의 규모추정 만이 가능
- 여기서는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활용할 때, 각 종사지위 집단 내 빈곤층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음
- 근로능력유무(미래 중심적 개념)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치는 아래와 같음.

-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2.2%
 - 임시직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10.9%
 - 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29.6%
 - 고용주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3.6%
 - 자영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23.5%
 - 무급가족종사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30.1%
 - 실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28.5%
 -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은 23.5%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상태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분포를 소득계층별로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 전체 빈곤층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40.5%, 비임금근로자는 44.6%, 실업자가 14.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사회 근로빈곤층의 규모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이는 2007년 현재 우리사회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3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집단 내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줌.
 - 연 평균 실업율이 3~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빈곤층 중 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실업자의 빈곤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임.

□ 규모추정에 따른 함의

-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은 종사상지위와 밀접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종사상지위 자체가 개인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임.
- 향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임금근로자외에도 비임금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러 있는 ‘감취진 노동인구’, 즉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제12장 근로빈곤층의 소득구조와 동태성

□ 글의 기본구조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실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의 수준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
-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은 고용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동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매우 중요.

□ 선행연구

- 근로빈곤층은 고용지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잦고, 고용지위의 변화가 소득지위의 변화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임. 이는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의 <고용불안·실업·저임금>은 소득지위의 반복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
-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2005년까지 3년간 1분기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5.1%에 달하며, 그 중 계속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4.1%,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16.1%,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14.9%로 추정됨. 그리고 이러한 소득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중사상지위로 나타남(노대명 외, 2006).

□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소득특성

- 근로빈곤층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흥미로운 것은 근로빈곤층 내부에서도 교육수준과 연령 그리고 성별이 근로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임.
- 근로빈곤층의 소득수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선 주위에 분포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소득특성

- 근로빈곤층의 소득동태성은 비빈곤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취업과 실업의 반복을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함.
- 근로빈곤층의 소득동태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취업하더라도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순환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달리 표현하면, 근로빈곤층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으며, 일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실업이라는 고리에 갇혀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용직에서 비상용직으로의 고용변동은 소득의 급격한 변화 - 주로 감소 -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중상위층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지위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

□ 정책적 시사점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근로빈곤층이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근로소득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큰 폭으로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은 각 중상위층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수요 측면의 접근과 각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접근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13장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 분석

□ 근로빈곤층 빈곤원인으로서의 고용불안

- 현재 우리사회에서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가 빈곤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고용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음.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얼마나 짧은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

- 먼저 상용직 중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동일한 상용직이라도 내용적으로 비정형적인 취업상태에 있는 종사자의 규모가 크며, 이들을 중심으로 빈곤층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함.
 - 상용직 근로자 중 빈곤층의 평균 고용기간은 36.9개월인데 비해, 비빈곤층은 93.9개월로 나타나고 있음.
- 이어 임시직과 일용직은 소득계층에 따라 고용유지기간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고용불안이 만성화된 두 집단의 빈곤문제는 다른 가구원을 통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끝으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빈곤층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집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그 배우자 또한 함께 무급종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하고 있음.
 - 자영업자 중 빈곤층의 평균 근로기간은 179.8월인데 비해, 비빈곤층은 124.8개월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 기업규모별 고용유지기간

-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농업 등이 포함되어 분석을 하는 경우,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분석과정에서는 농업을 제외하고 고용유지기간을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전체 업종 중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고용유지기간이 가장 긴 업종은 공공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행정부문의 고용안정 및 정년보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문 또한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규모별 고용유지기간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기업규모가 4인 이하인 기업의 고용유지기간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유지기간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임. 하지만 같은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더라도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은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위에 언급한 종사상지위가 갖고 있는 고용의 한시성에 기인한 것임.

□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

- 먼저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교육기간이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과 관련해서는 30세 이하 집단에 비해 40대와 50대 집단의 고용유지기간이 길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낄수록 고용유지기간이 단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기간이 길수록 고용유지기간이 단축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교육수준이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 이어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주여부와 가구규모가 고용기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주에 비해 비가구주가 고용유지기간이 단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가구규모가 증가할수록 고용유지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취업에 따라 가사를 담당할 가구원이 존재함에 따라 취업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각 개인의 종사상지위는 고용유지기간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종사상지위가 이미 고용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최종모형의 승산비율(odds ratio)을 보면, 임시직근로자가 고용유지기간이 짧은 집단(평균미만)에 속할 확률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약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끝으로 가구단위의 소득수준과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그것이 설명력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지 살펴보았음. 그 결과,
 - 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나며, 개인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고용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가구단위 소득과 개인단위 소득이 고용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제14장 근로빈곤층의 기초보장실태 분석

□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2005년 자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음. 그 결과는 근로빈곤층 중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비중이 비빈곤층에 비해 약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 이에 비해 기초보장수급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빈곤층 전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여기서는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진입시점

- 200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제도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분포를 보면, 수급자 중 상당수는 2000년 제도도입 초기에 가장 큰 규모로 유입되었으며, 일정기간 유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2003년 이후 다시 큰 규모로 유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 이후 진입한 수급자 규모가 큰 것은 수급자의 내부적인 진출입 요인 외에도 2004~2005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연도별 유입추세는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출

- 먼저 행정집계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2007년 현재 약 156만 명 가량의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2000년 제도도입기의 규모와 유사함.
- 복지패널 데이터에서 각 시점별로 상당수의 빈곤층이 제도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급자가 제도에서 탈출 또는 탈락하였음을 의미함. 물론 탈수급자의 비율은 케이스의 규모가 적어 신뢰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더라도, 수급탈출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탈출율을 보면, 약 4.87%로 추정됨. 이는 2005년도에 수급자로 유입된 인구가 전체 수급자의 17.8%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수급탈출자의 평균 수급개월은 34.4개월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52.3개월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 이유는 탈수급자에서 근로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탈수급자 비중을 보면, 근로가능자가 약 6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이는 가구원을 포함할 때, 전체 탈수급자의 약 80% 이상이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을 말해 줌.

□ 정책적 시사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음. 그리고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탈수급실태 분석결과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바임. 본 복지패널조사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탈수급율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임. 이는 현실에서도 근로빈곤층이 탈수급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제15장 여성근로빈곤층의 비경활 결정요인 분석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촉진 정책의 필요성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임.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장애요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축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여기서는 왜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경제 활동인구의 특성과 원인을 살펴보고,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거나 그 집단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의 분포를 보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는 연령층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여성의 연령이 높을 수록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임.
- 교육수준을 보면, 빈곤층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졸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비빈곤층 중에서는 그 비율이 40.1%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저학력자가 빈곤층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빈곤층에서 혼인상태 중 이혼사별은 43.8%인데 비해 비빈곤층에서는 12.2%로 나타났다으며, 직업기술 유무 중 직업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6.7%와 17.5%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 비경제활동 결정요인 분석결과

- 개인특성 중 연령(50세 이상), 교육수준, 건강상태(불량), 장애유무, 주관적 건강만족도의 변수가 비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29세 이하 집단에 비해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일 확률이 2.2배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고졸 집단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서는 양호한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불량인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일 확률이 1.4배 정도 높게, 장애유무에서는 장애가 없는 데 비해 있는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할 확률이 1.8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가구특성 중에서는 혼인상태와 부양아동유무 등이 비경제활동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특성 중 혼인상태에서는 미혼에 비해 유배우일 때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1.2배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부양아동유무에서는 부양아동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일 확률이 1.5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음.
- 취업특성 변수인 직업기술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음. 이는 역시 직업기술의 유무가 경제활동여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을 보여주는 것임.

□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 결과적으로 여성이 비경제활동 집단에 속하는 주요인으로는 고연령, 좋지 않은 건강상태, 장애, 부양아동, 직업기술유무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취업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의 연령이나 성에 의한 차별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에 양육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집단은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적인 측면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취약계층과 감춰진 노동인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제1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복지패널 조사결과에 분석이 갖는 의미

-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복지패널조사는 4년간에 걸친 자활조사가 갖는 다양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이는 보다 큰 규모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자활조사 데이터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쟁점화 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산빈곤의 문제, 취업잠재력의 문제, 빈곤의 동태적 특성의 문제 등을 중요한 연구과제이자 정책현안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본 분석결과의 시사점

- 이미 많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층 일반의 소득격차와 취업상태, 자산빈곤 등의 문제가 폭 넓게 언급되어 왔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음. 그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노동이동의 증가에 따른 소득계층의 하향이동 문제
 - 본 보고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단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고용불안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고용유지기간을 분석하였음.
 - 그 분석결과는 노동이동 자체는 근로소득과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 상위와 하위로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그 충격은 저학력자 등 취약집단에게 소득의 하향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이들의 고용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동수요정책(일자리 창출정책)과 노동공급정책(훈련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둘째,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이 부진하다는 문제
 - 여기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진입시점 및 수급탈출시점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분석하였음.
 -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출한 수급자의 비율은 4.87%로 신규로 진입한 수급자 17.8%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탈수급하는 수급자의 대부분이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 물론 이러한 현상은 2004~2005년 수급자 규모를 확대한 것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 외에도 기존 선행연구결과는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기초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셋째, 여성 빈곤층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많다는 점

-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 중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는 이유를 살펴보았음. 근본적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은 결혼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장기화되고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에게서 그러한 선택이 지배적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50대이상과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50대 미만의 여성이며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빈곤층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세 가지 정책제안

- 첫째, 근로빈곤층의 고용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함. 이는 거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저임금노동시장에서 탈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안정적인 일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인적자본개발을 통해 노동의 상향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근로빈곤층 개인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이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의 빈곤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 둘째, 여성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가 필요함. 빈곤층의 탈빈곤과 탈수급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나, 이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보육이나 간병 등의 가사서비스 문제가 지적되었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 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이 요구됨.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는 생계, 주거, 의료 등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지원이나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

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논의를 근로빈곤층 문제와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석훈(2002),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철 외(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재호(1998), 『캐나다 고용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김상균 외(2005),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남재량(2004),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외(2004),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2005),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 박홍래(1989),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 박희봉 외(2003), “한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의 산물인가?”, 한국행정 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백화중 외(2004),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화중 외(2004), 『차상위·빈곤패널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국민기초생활보장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년도
- 신동균(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이봉주 외(2006),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 이용하(2003),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인재(2004), 『한국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정의와 비정규직의 개념』, 한국노동연구원.
- 이태진 외(2005),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출(2005),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 홍종선 외(2000),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박영사.
- SBS & Gallup Survey(2006),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2. 외국문헌

- Boarini, A. Johansson and M. Mira d'Ercole(2006), "Alternative measures of well-being",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476 an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3, Paris.
- Cochran, W. G.(1977), Sampling Techniques, 3rd Eds, New York, John Wiley & Sons.
- Deville, J. C., Sarndal, C. E.(1992), Calibration Estimators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pp.376-382.
- Deville, J. C., Sarndal, C. E., and Sautory, O.(1993), Generalized Raking Procedure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 pp.1013-1020.
- Dufour, J. Gagnon, F., Morin, Y., Renaud, M., and Sarndal, C. E.(2001), A Better Understanding of Weight Transformation through a measure of Change, Survey Methodology, 27, pp.97-108.

- Durrant, G. B.(2005), Imputation Methods for Handling Item-nonresponse in the Social Sciences : A Methodological Review, ESRC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Methods and Southampton Statistic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NCRM Method Review Papers.
- Greg J. Duncan(1989), 「Panel Studies of Poverty: prospects and Problems」,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Joachim R. Frick(2004), 「Introduct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Jürgen Schupp, 「20 Years of Household Panel Data for Germany : The SOEP survey and organization between continuity and innovation」, DIW-Berlin.
- John P. Haisken-DeNew and Joachim R. Frick (Eds.)(2003), 「Desktop Compan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SOEP)」, DIW Berlin.
- Kalton, G., and Flores-Cervantes, I.(2003). Weighting Methods, *Journal of The Official Statistics*, 19(2), pp.81-97.
- Kalton, G. and Kasprzyk, D.(1986), The Treatment of Missing Data, *Survey Methodology*, 12, pp.1-16.
- Kish, L.(1979), Samples and Censu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47, pp.99-110.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Lessler, J. T., and Kalsbeek, W. D.(1992),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New York, Chichester.
- Little, R. J. A.(1986). Survey Nonresponse Adjustment for Estimates of Mean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54(2), pp.139-157.
- Little, R. J. A. and Rubin, D. B.(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John Wiley & Sons.
- Lohr, S. L.(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 Lundstrom, S.(1997), Calibration as a Standard Method for Treatment of Nonresponse, Ph.D. thesis, Stockholm University.
- Martin Spieß. and Martin Kroh(2004), 'DIW Materialien Research Notes : Documentation of Sample Sizes and Panel Attrition 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GSOEP) (1984 until 2003)'.
- Peter Gottschalk, Patricia Ruggles(1994),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o Study Poverty and Welfare Dynamics', Paper Commissioned by the PSID.
- Rizzo, L., Kalton, G., and Brick, M.(1996), A Comparison of some Weighting Adjustment Methods for Panel Survey, Survey Methodology, 22, pp.43-53.
- Rohe, W.(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 Samdal, C.E., Swesson, B., and Wreteman, J.H.(1992), Model Assisted Survey Sampling, New York, Springer-Verlag.
- Schiller, B. R.(1984),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4th ed.
- Schouten, B.(2003), Reduction of Nonresponse Bias using Auxiliary Variables. Report 1814-02-TMO. Statistics Netherlands, Methods and Informatics Department, Voorburg, The Netherlands.
- UNDP(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 Wolter, K. M.(1985), Introduction to Variance Estim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orld Bank.(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18.
- Yung, W. and Rao, J.N.K.(1996) Jackknife linearization variance estimators under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Survey methodology, 22, pp.34-44.
- Zhang, P. (2003), Multiple Imputation: Theory and Method,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1, pp.581-592(with Discussions).

<http://www.atkinsonfoundation.ca/ciw> (캐나다 웰빙지수(CIW))
<http://www.diw.de/gsoep> (DIW-Berlin, 2004. 6)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psidonline.isr.unich.edu> (미국 PSID)
<http://www.bls.census.gov/cps/> (미국 인구조사국(CPS))
<http://www.gepco.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iser.essex.ac.uk/ulsc/bhps/> (영국 BHPS)
http://www.kli.re.kr/30_labp/01_labor_p/main.as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http://www.ktpf.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HILDA Website)
<http://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ps.go.kr>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sipp.census.gov/sipp/> (미국 SIPP)
<http://www.statcan.ca/>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캐나다 통계청: SLID)
<http://www.statistics.gov.uk> (영국 통계청)
<http://www.worldvaluessurvey.org/statistics/index.html> (International Network of Social Scientists 홈페이지)